

2015년 지방직 9급 사회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지방직 9급 사회는 경제 5문제, 법과정치 10문제, 사회문화 5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2015년 지방직 사회는 작년 2014년 지방직 사회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경제의 경우, 표와 그림 등으로 제시된 문항이 있었으나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탄력성 문제의 경우 기존의 출제 유형에서 볼 수 없는 문항이었으나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을 알고 있었다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과정치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이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개념서를 꼼꼼히 보신 수험생 분들이라면 문제풀이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문화의 경우,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빈출되는 주제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개념서와 문제집 등을 통해 익숙하게 보아 온 문항이 많이 출제되어 문항 해석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기출문제를 통한 개념 적용, 반복적인 문제풀이 연습이 점수를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문항	영역	개념서 단원	세부 주제
1	경제	[1권] 05. 정부의 경제 활동	생산 가능 곡선
2	경제	[1권] 12. 국민 경제의 순환과 경제 성장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3	경제	[1권] 13. 물가와 인플레이션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4	경제	[1권] 08.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5	경제	[1권] 13. 물가와 인플레이션	경제 지표 분석
6	사회문화	[2권] 49. 사회 계층과 사회 이동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
7	사회문화	[1권] 20.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관료제
8	사회문화	[2권] 50. 사회 문제와 일탈 행동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9	사회문화	[1권] 22.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인구 자료 해석
10	사회문화	[1권] 19. 개인과 인간의 사회화	개인과 사회의 관계
11	법과정치	[2권] 38. 불법 행위 책임과 개인 간 분쟁 해결	개인 간 분쟁 해결
12	법과정치	[2권] 42.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형벌과 형사 절차
13	법과정치	[2권] 41. 부동산 거래와 무체 재산권	주택 임대차 보호
14	법과정치	[2권] 42.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위법성 조각 사유
15	법과정치	[2권] 44. 청소년·근로자·소비자의 권리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16	법과정치	[2권] 35 행정부와 사법부,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
17	법과정치	[2권] 33. 헌법의 의의와 기본권	자유권
18	법과정치	[2권] 45. 국제 사회와 국제법	국제 연합
19	법과정치	[2권] 32. 여론과 정치 문화	여론
20	법과정치	[2권] 29.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2015년 지방직 사회 가답안 ㉠책형 •

1	①	2	③	3	④	4	④	5	③
6	④	7	①	8	①	9	③	10	②
11	②	12	②	13	②	14	①	15	④
16	④	17	②	18	②	19	③	20	④

• 2015년 지방직 사회 가답안 ㉡책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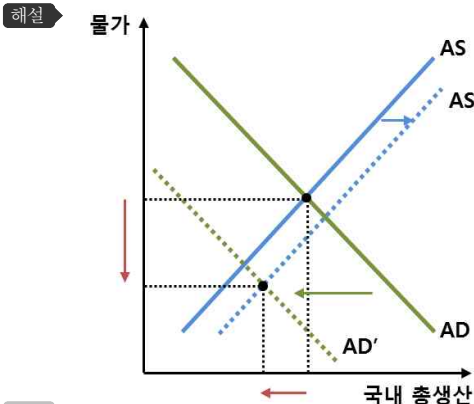
1	②	2	②	3	②	4	①	5	④
6	④	7	②	8	②	9	③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④	15	③
16	④	17	①	18	①	19	③	20	②

02 다음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총수요-총공급 모델을 이용하여 물가 수준과 국내 총생산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가) 소비와 투자의 위축
 (나) 기술 수준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
 (다)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큼.

- ① 물가 수준 하락, 국내 총생산 증가
 ② 물가 수준 하락, 국내 총생산 감소
 ③ 물가 수준 상승, 국내 총생산 증가
 ④ 물가 수준 상승, 국내 총생산 감소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② | ○ | (가)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총수요는 감소하며, 이에 총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나) 기술 수준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으로 총공급은 증가하며, 이에 총공급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이때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크다고 했으므로 총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이 총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보다 훨씬 크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왼쪽 그림과 같다. 따라서 물가 수준은 하락하고, 국내 총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참고

총수요의 변동

구분	총수요 증가	총수요 감소
이동	총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	총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
원인	민간 소비 증가, 민간 투자 증가, 정부 지출 증가, 순수출 증가	민간 소비 감소, 민간 투자 감소, 정부 지출 감소, 순수출 감소
결과	물가 상승, 국민 소득 증가(실업 감소)	물가 하락, 국민 소득 감소(실업 증가)

총공급의 변동

구분	총공급 증가	총공급 감소
이동	총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	총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
원인	생산 기술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생산 요소의 양 증가, 임금 하락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 요소의 양 감소, 임금 상승 등
결과	물가 하락, 국민 소득 증가(실업 감소)	물가 상승, 국민 소득 감소(실업 증가)

03 다음 표는 빵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2011년 실질 GDP와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연도	생산량(개)	가격(원)
2010	1,000	2
2011	1,500	3

- ① 3,000원, 120 ② 3,000원, 150
 ③ 4,500원, 120 ④ 4,500원, 150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해설 명목 GDP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에 당해 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실질 GDP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에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실질 GDP×100'으로 구한다. 주어진 표를 통해 명목 GDP,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의 명목 GDP	당해 연도의 생산물×당해 연도의 가격	1,500개×3원=4,500원
2011년의 실질 GDP	당해 연도의 생산물×기준 연도의 가격	1,500개×2원=3,000원
2011년의 GDP 디플레이터	$GDP\text{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 GDP}{\text{실질 } GDP} \times 100$	$\frac{4,500\text{원}}{3,000\text{원}} \times 100 = 150$

- ② | ○ |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2011년의 명목 GDP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인 1,500개와 당해 연도의 가격인 3원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11년의 명목 GDP는 4,500원이다. 2011년의 실질 GDP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인 1,500개와 기준 연도의 가격인 2원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11년의 실질 GDP는 3,000원이다. 201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4,500원)÷실질 GDP(3,000원)×100'으로 150이다. 따라서 2011년의 실질 GDP와 2011년의 GDP 디플레이터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3,000원과 150이다.

참고

I 명목 GDP와 실질 GDP

명목 GDP	•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에 당해 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함. • 생산물의 수량과 가격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남.
실질 GDP	•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에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함. •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생산물 수량의 변동만을 나타냄.
GDP 디플레이터	$GDP\text{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 GDP}{\text{실질 } GDP} \times 100$

- ① 15% ② 20%
- ③ 25% ④ 30%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동분(%)÷가격의 변동분(%)'이며 (수요량의 변동분÷원래의 수요량)÷(가격의 변동분÷원래의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로 구할 수 있다.

① | ○ | 소득 수준이 10% 하락할 경우라고 했으므로 이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로 '1.5=수요량의 변화율(%)÷-10%'이다.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율은 -15%로, 소득이 10% 하락하면 컴퓨터의 수요량은 15%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0이므로 가격이 15% 하락하면 수요량은 15% 증가한다.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가격을 15% 인하하여야 한다.

참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수요량이 변하는 민감도 • 재화서비스의 가격이 1% 변동할 때 수요량이 몇 % 변동하는가를 나타냄. $\bullet \left \frac{\text{수요량의 변동률}(\%)}{\text{가격의 변동률}(\%)} \right = \left \frac{\frac{\text{수요량의 변동분}}{\text{원래의 수요량}}}{\frac{\text{가격의 변동분}}{\text{원래의 가격}}} \right $
수요의 소득 탄력성	• 소득의 변화에 따라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냄. $\bullet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소득의 변화율}(\%)}$

▶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재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음수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열등재가 된다.

05 다음 표는 A국의 경제 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경제 성장률	3.6	3.1
물가 상승률	6.9	3.3
실업률	5.2	5.8
인구 증가율	4.5	2.7

- ① 총수요가 감소했다.
- ②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 ③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 ④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했다.

경제 지표 분석

- 해설** ① | X | 경제 성장률은 금년도 GDP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로, 국민 경제의 성장 속도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경우 실질 성장률(실질 GDP의 증가율)을 사용한다.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3.1%로 실질 GDP는 증가했다.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경우는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때 총수요의 증가는 물가 상승을 동반하나, 총공급의 증가는 물가 하락을 동반한다. 2014년의 물가 상승률은 3.3%로 증가했으므로,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총수요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 X | 2014년의 물가 상승률은 3.3%로 물가는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하면 일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양이 감소하며, 화폐 가치는 낮아진다.
- ③ | X |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 수를 의미한다. 2014년의 실업률은 5.8%로 증가했다. 다만, 주어진 표에서는 실업률만 제시되어 있을 뿐, 경제 활동 인구의 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업자 수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 ④ | O | 1인당 실질 GDP는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2014년의 경제 성장률(실질 GDP의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 모두 증가하였으나, 경제 성장률의 증가가 더 크므로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하게 된다.

참고

■ 각종 지표

경제 성장률 (실질 GDP 증가율)	$\frac{\text{금년도 실질 GDP} - \text{전년도 실질 GDP}}{\text{전년도 실질 GDP}} \times 100$
물가 상승률	$\frac{\text{금년 물가지수} - \text{전년 물가지수}}{\text{전년 물가지수}} \times 100$
실업률	$\frac{\text{실업자}}{\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06 다음 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자란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입시 경쟁의 출발점부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입시 경쟁은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배 집단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 ㄱ. 사회 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 ㄴ. 차등적인 보상 체계는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ㄷ. 자원 분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 ㄹ. 사회의 희소 자원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이러한 분배의 결과로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

해설 제시문은 입시 경쟁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또한 사회 지배 집단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므로 갈등론에 해당한다.

- ㄱ. | X | 사회 계층화 현상이 필수 불가결한 현상임을 주장하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 ㄴ. | X | 차등적인 보상 체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 ㄷ. | ○ |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특정 집단, 즉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 ㄹ. | ○ | 갈등론은 사회의 희소 자원이 지배 집단에 유리하게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는 입장이다.

참고

사회 계층을 바라보는 관점

구분	기능론	갈등론
사회 계층화 현상의 의미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적 분배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	지배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의 기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 →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배분됨.	기득권층에 유리한 기준 및 가정 배경, 권력, 경제력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배분됨.
사회 계층화 현상의 기준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장치 → 동기 부여와 인재 충원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장애 요소 → 상대적 박탈감과 집단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발전에 저해
한계	가정 배경 등의 현실적 영향력 간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요인 무시
사회 불평등에 대한 관점	사회 불평등은 필연적이라는 보수적 관점으로, 사회 불평등은 인간의 능력 차이와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 체계의 결과라고 봄.	사회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진보적 관점으로, 사회 불평등은 힘을 가진 집단의 강압에 의해 유지된 것이라고 봄.

▶ ④

07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 대형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①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②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 ③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료제

- 해설** ① | X | 관료제는 일반적으로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 ② | O |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때에 따라 목적 전치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 ③ | X | 연공서열의 중시에 따른 무사 안일주의는 제시문과 관련이 없다.
- ④ | X | 관료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참고

I 관료제의 기능

순기능	• 효율성 : 과업을 세분화·전문화함으로써 대량 생산 체제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짐. • 안정성 :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의존하며 구성원들의 신분이 보장되므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짐. •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며 과업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음. •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 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업 수행에 있어 책임 소재가 분명하며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막음. • 구성원 교체에 따른 혼란 감소 • 공개 채용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역기능	• 목적 전치 현상 : 규약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본래의 목적 달성을 방해함. • 인간 소외 현상 :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분담한 일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창의력이나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의 부속품으로 전락함. • 비능률성 : 연공서열의 강조로 인한 무사 안일주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짐. •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 규칙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경직된 상명하복 구조를 지니고 있어 주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함. • 개인의 창의성 무시

08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 ②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하위문화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 ③ 낙인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이 되는 것은 사회가 일탈 행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 ④ 기능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일탈 행동

- 해설** ① | ○ |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이 일탈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 ② | X |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③ | ○ | 낙인 이론은 일탈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원래부터 일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탈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 ④ | ○ | 일탈을 바라보는 기능론의 입장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있어야 할 사회 구성 요소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

1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아노미론	뒤르켐	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할 때,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 <pre> 급격한 사회 변동 → 규범의 붕괴 →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 혼란 → 일탈 </pre>
	머튼	문화적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제도적 수단에 괴리가 생긴 상태 <pre>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 일탈 </pre>
차별적 교제 이론	• 일탈을 일삼는 개인이나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 • 해결 : 일탈자 또는 일탈 집단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격리함으로써 일탈의 학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낙인 이론	• 1차적 일탈의 발생 → 주위 사람들이 계속하여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낙인) → 스스로를 일탈자라고 인식 → 일탈 행동을 계속함(2차적 일탈). • 일탈을 규정짓는 객관적인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함. • 대책 :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 필요	

09 다음 표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별 가구 형태 분포〉

구분	총 가구수	1인 가구수	1세대 가구수	2세대 가구수	3세대 이상 가구수
A지역	10,000	3,000	4,000	2,500	500
B지역	8,000	3,500	4,000	400	100

- ① A지역이 B지역보다 핵가족 수가 적다.
- ② A지역이 B지역보다 총 인구수가 적다.
- ③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
- ④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낮다.

인구 자료 해석

- 해설**
- ① | X | 제시된 자료는 2세대 가구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가족 수를 파악할 수 없다.
 - ② | X | 가구 구성원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지역의 총 인구가 더 많고 적은지 판단할 수 없다.
 - ③ | ○ | 1인 가구는 가구당 인구가 1명이므로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
 - ④ | X | A지역은 총 가구수 10,000 중 1세대 가구수 4,000이며, B지역은 총 가구수 8,000 중 1세대 가구수 4,000이다. 따라서 1세대 가구 비율은 A지역이 B지역보다 낮다.

참고

1인 가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중이 25.3%이다. 진학 혹은 취업을 위해 상경한 전 통적 형태의 청소년 독신 가구 외에도 기러기 아빠로 통칭되는 홀로 사는 중년 남성, 골드미스 중년 여성, 만혼화에 따른 독신, 청년 독신 가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는 홈리스 등 새로운 형태의 독신 가구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위험의 증가를 가져온다. 가족의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족의 해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나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위한 특별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홈리스,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 취약자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다.

10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전체는 단지 외부의 힘에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하나의 연합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하더라도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 (나) 인간 개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즉, 집단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리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는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

- ① (가)에서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② (가)에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③ (나)에서 개인의 능동성은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④ (나)에서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해설 (가)는 사회 명목론, (나)는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다.

- ① | X | 개인은 사회 속에서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② | X |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독자적으로 작동한다는 주장은 사회 실재론이다.
 ③ | X | 개인의 능동성을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 명목론이다.
 ④ | O |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 즉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참고

■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구분	사회 명목론	사회 실재론
의미	사회는 명목상에 불과함.	사회는 실제로 존재함.
기본 입장	• 사회보다 개인의 우월성 강조 •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 있음.	• 개인보다 사회의 우월성 강조 • 사회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에 있음.

▶ ④

11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B에게 1년 후 돈을 받기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화가 난 A는 빌려간 돈 전액을 갚을 것을 B에게 재촉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 ①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해결한다.
- ② 민사 조정을 신청한다.
- ③ 내용 증명 우편을 B에게 발송한다.
- ④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개인 간 분쟁 해결

- 해설** ① | X | 소액 사건 심판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진행한다.
 ② | O |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③ | O | 상대방에게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 O |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금전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내용 증명 우편	발송 사실, 발송 일자 등 증명 ㉠ 채권 행사 ㉠ 상대방의 반응 유도
조정 제도	당사자 간 상호 양해 타협 ㉠ 쌍방 수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중재 제도	쌍방 수락 없이 법적 구속력 부여 ㉠ 언론, 노동 문제에서 많이 활용됨.
소액 사건 심판	소송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한 절차
공증	문서에 대한 강한 증명력 부여

12 형벌과 형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 ③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
- ④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형벌의 부과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형벌과 형사 절차

- 해설** ① | ○ | 소년법상 소년원 송치는 보호 처분에 해당한다.
 ② | ○ | 체포 시 경찰관은 체포 및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X |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④ | ○ |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제2호).

참고

Ⅰ 보호 처분

- ① 지방 법원 소년부가 심리의 결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하여 연도하는 처분을 말함.
- ② 보호 처분은 그 가해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소년법 제32조 제6항).

Ⅱ 국민 참여 재판

의미	일반 시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벌을 담당 재판관과 토의하는 재판
적용	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형사 사건 중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배심원 자격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한 전과를 가진 사람이나 변호사·경찰관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
특징	•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음. •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음. •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짐.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 등기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 입주하며 전입 신고와 ㉣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① ㉠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③ ㉢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

- 해설** ① | X | 부동산 등기부는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② | X |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 X | 우선 변제는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입주가 필요하다.
 ④ | O | 확정 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지방 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확정 일자 부여 기관"이라 함)에게 부여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참고

■ 주택 임대차 보호

임차권의 대항력	대항 요건	주택의 인도+주민 등록(전입 신고 다음날 효력)
	대항력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수익 보장+양수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우선 변제권	요건	대항 요건+임대차 계약서상 확정 일자
	효과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요건	대항 요건
	효과	소액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14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처분 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 조각 사유

- 해설** ① | ○ |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 ○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 ○ | 처분 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 X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이다.

참고

Ⅰ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자구 행위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 불능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정당 행위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한 법익 훼손 행위

▶ ④

16

A는 진 모 씨 등이 “전국의 모든 PC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가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 ○○일보, 0000년 00월 00일 -

- ① 행정 소송 ② 형사 재판
③ 선거 재판 ④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재판소

해설 ①·②·③ | X | 행정 소송, 형사 재판, 선거 재판은 법원의 권한에 해당한다.

④ | ○ | 헌법 재판소의 권한은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등이다.

참고

헌법 재판소의 권한

권한	제소 기관	결정	효력
위헌 법률 심판	법원 (제청)	6인 이상의 찬성	• 법률의 효력을 상실 •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탄핵 심판	국회 (소추)	6인 이상의 찬성	• 공직에서 파면시킴. •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로 처벌하기가 곤란한 고위 공무원의 제재 → 행정부 견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부 (제소)	6인 이상의 찬성	•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강제 해산 • 입법부에 대한 견제
권한 쟁의 심판	해당 기관 (청구)	과반수 찬성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권한 분쟁을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국민 (청구)	6인 이상의 찬성	•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해당 법령·처분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 법적·제도적 구제가 없는 경우 최후의 마지막 수단임. •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음.

17 다음 글에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인권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CCTV 등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할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와 같은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라며, “구금 및 보호 시설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 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신문, 0000년 00월 00일 -

- ①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 ②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 ④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

해설 제시문은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자유권이다.

- ① | ○ | 자유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 ② | X |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 ③ | X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은 청구권을 말한다.
- ④ | X | 국민이 국가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참고

I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이며 다른 기본권의 목적적 가치임.
평등권	• 포괄적 기본권 ㉠ 국가에 의한 차별 배제 요구 • 국가에 실질적 평등을 요구
자유권	포괄적·소극적·방어적 기본권 ㉡ 소극적 자유(국가로부터 자유)
사회권	국가에 의한 자유 ㉢ 적극적 자유를 위한 권리
참정권	• 국가 운영에의 참여 보장 ㉣ 국가에의 자유(능동적 권리) ㉤ 적극적 자유를 위한 권리 • 지방 선거에서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청구권	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에 급부를 요청하는 적극적·절차적·수단적 권리

18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 A가 창설되었다. A는 평화 유지 업무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A의 평화 유지 업무를 위한 책임은 산하 기관인 B에 있는데, B는 핵 확산 방지, 군비 축소, 테러 국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제재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① A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 ② A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 ③ B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 ④ B의 의결 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 연합

해설 A는 국제 연합,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 ① | ○ | 국제 연합은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 정치 행위자 중 초국가적 행위자로 분류된다.
- ② | X | 국제 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 ③ | X |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 기구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 ④ | X |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경우 상임 이사국만이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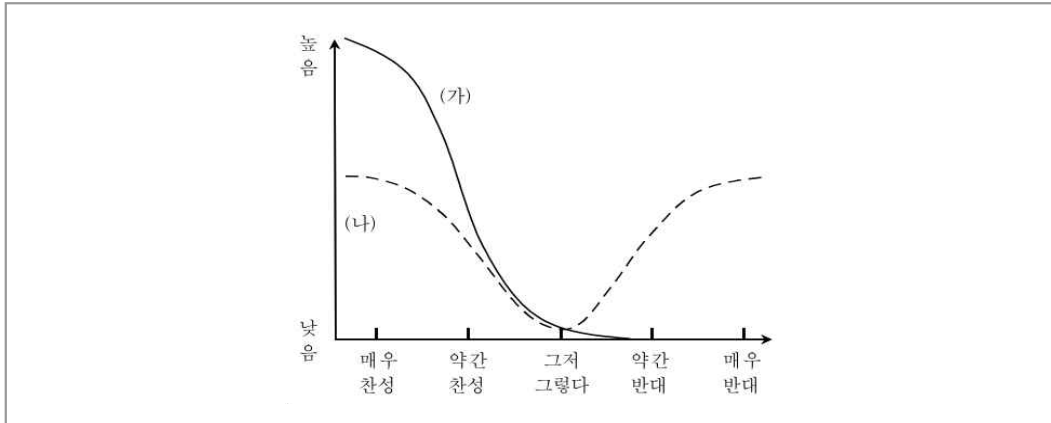
참고

국제 연합

총회	•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 된 형식상 최고 의결 기구 • 1국 1표 주위에 의한 표결(주권 평등 원칙)
안전 보장 이사회	• 구성 : 상임(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비상임(임기 2년, 10개국) •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인정(현실주의, 주권 불평등)
국제 사법 재판소	당사국의 합의하에 재판 개시 된 강제적 관할권 없음.

▶ ①

19 (가)와 (나) 여론 분포의 유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 ②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③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 ④ (나)는 (가)보다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여론

해설 (가)는 합의형 여론, (나)는 분산형 여론에 해당한다.

- ① | ○ |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 여론이 형성된 것은 (가)이다.
- ② | ○ |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가)는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③ | X | (나)는 국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정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④ | ○ | (나)는 여론이 분열되어 있어 사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참고

여론의 분포

분산형 여론	합의형 여론
여론이 특정 문제에 관하여 '매우 찬성'과 '매우 반대'로 분열된 경우로 국민 통합이나 국민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회 갈등, 반목, 대립이 예상되어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곤란함.	특정 문제에 관하여 여론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모형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음.

20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되지 않나?

을 :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갑 : 그럼 어떤 요소가 있니?

을 : _____

- 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 ②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
- ③ 국회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 ④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해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묻고 있다.

- ① | ○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 ② | X | 우리나라 국회에는 내각 불신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 ○ | 국회의원과 국무 위원의 겸직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 ④ | ○ | 국회가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참고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대통령제적 요소	의원 내각제적 요소
┌ 총선거에 의한 의회 구성 └ 대통령 선거에 의한 행정부 구성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국무총리 •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 • 국무 회의(심의 기관) • 각료의 의원 겸직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무 위원의 국회 출석·발언권 •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권 • 국회의 국무총리·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의 부서권